

# 한국당 장외투쟁에 민생법안 통과 난망

민주 “국정농단 물타기 색깔론”

정의장·원내대표 회동 파행

내일 본회의 쟁점법 처리 불투명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화적 분위기로 끝났지만 여야 정치권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을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갔다.

김 부위원장 방남을 저지하기 위해 통일 대교 밤샘농성을 감행한 자유한국당은 이날은 ‘체제전쟁’까지 운운하며 장외투쟁 장기화를 예고했다. 이번 김 위원장 방남을 저지해 심야 보수 진영 결집을 시도한다는 내부 전략을 사실상 굳히고 반발의 강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한국당이 역대 장외투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의 다스 수사 등 국정농단 의혹을 피하기 위한 ‘색깔론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평창올림픽의 평화 분위기를 이어 남북 간 대화와 교류, 한반도 긴장완화를 현실로 만드는 포스트 평창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여야의 대립 속에 당장 국회 현안 논의를 위해 마련된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의 정례 회동이 고성만 주고받은 끝에 파행 종료됐다.

이날 회동에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꼭 통과시켜야 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법안도 산적해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지난해 연말 서로 약속한 물관리위원회 문제를 2월에 마무리해야 한다. 정부 출범 10개월이 다 돼가는데 정부 조직법을 완성하지 못한 것은 국민이 보기



“이제 포스트 평창 준비할 때”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 중국 여성 정치인 류옌둥 국무원 부총리,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등이 25일 강원도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에도 죄송한 일”이라며 “개헌과 관련한 교섭단체 간 협의의 문턱도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회동장 분위기는 싸늘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현송월·김여정·김영철에 의해 올림픽이 정치판으로 변질됐다”며 “김영철을 ‘개구멍’이 아닌 군사작전도 로까지 열어주며 빼돌려서 초호와 호텔에 국민급으로 모시는 작태에 서글픔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야당을 탄압하고, 집권여당 원내대표는 야당을 무시하고 있다”며 “정말 할복이라도 하고 싶은 제 1야당 원내대표의 심정”이라

고 말했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는 1시간가량 비공개로 논의했지만 고성이 흘러나오는 등 현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으며 결국 합의 없이 회동을 종료했다.

국회도 곳곳에서 삐걱거렸다. 한국당 장외투쟁 여파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등 일부 상임위 회의가 취소됐고, 한국당이 김 부위원장 방남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위해 운영·정보·국방·외통 등 안보 상임위 소집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해당 상임위 파행도 예고된 상황이다.

이날 오후 일방 소집될 예정이었던 운영위는 한국당의 장외투쟁 일정으로 27일로 하루 늦춰졌다. 국방위는 오는 28일 운영

무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현안질을 진행키로 했다.

여권에선 이 같은 파행 국면이 계속돼 2월 임시국회가 별다른 주요 쟁점 법안 처리 없이 막을 내리게 될 경우 3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3월 국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임시회가 없는 3월의 경우 셋째 주에 상임위를 열도록 국회법에 근거 규정이 있는 만큼 상임위 법안 심사 후 ‘일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전남도의회 의장 등 6명 바른미래당 탈당



전남도의회 이종식·박현호·임명규·민병홍·조상래 의원이 26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바른미래당(옛 국민의당)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도의원 25명 전원 탈당

임명규 전남도의회 의장 등 도의원 6명이 26일 바른미래당(옛 국민의당)을 탈당했다. 이날 탈당한 의원은 임 의장을 비롯해 조상래(국성)·박현호(완도1)·이종식(장흥1)·민병홍(화순2)·주연창(여수4) 의원이다.

지난 5일 19명이 집단 탈당후에 이어 이날 2차 탈당이 이뤄짐으로써 바른미래당 소속 전남도의원은 한 명도 남지 않게 됐다.

임 의장 등 탈당 의원 6명은 이날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국민의당은 민의의 대변자라고 자처하면서도 실제 행보는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해 왔다”면서 “우리가

활동했던 국민의당과 더 이상 함께 하지 못해 오늘 탈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민 여러분께서 저희의 착잡하고 암울한 심정을 부디 헤아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면서 “앞으로 저희의 진로에 대해서는 각 지역민의 의견을 받들어 결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추가 탈당으로 옛 국민의당 소속 전남도의원 25명은 모두 탈당했다. 이들 중 조상래·민병홍·주연창 의원은 민주평화당 합류를 선언했고, 나머지 의원들은 민평당과 무소속 출마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한편, 임 의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보성군수에, 조상래 의원은 곡성군수에, 민병홍 의원은 화순군수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욱기자 jwpark@

### 6·13 선거 현장

#### ‘재선 도전’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 출판 기념회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이 지방자치에 대한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담은 책 ‘임우진의 리무진 품질자치’의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재선 도전에 나선다.

가 서구청장으로 재직 한 지난 4년간 서구에서 일어난 혁신적 변화와 그의 행정 철학 등이 담겨 있다.

임 구청장은 오는 3월 1일 오후 3시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임우진의 리무진 품질자치’의 출판기념회를 주제로 토론회 형태의 출판기념회를 연다. ‘임우진의 리무진 품질자치’에는 그

임 구청장은 “지방자치를 본격화한지 올해로 23년째이며, 이제는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력을 갖는 자치의 수준, 중앙으로부터 지방의 권한이 확대되는 분권의 수준이 과거와 질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 김형수 광산구 소녀상 시민모임 대표 구청장 출마

김형수 광산구 평화의소녀상 시민모임 대표가 6·13 지방선거 광주 광산구 정장 출마를 선언했다.

성과 미래비전을 갖춘 진정한 광주의 중심이 되는 광산 공동체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2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산을 향한 애정과 열정으로 다져온 비전, 소통 능력을 갖추고 광산형 공동체라는 새 역사를 쓰고자 구청장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전투비행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 참여자치광산주민회, 평화의소녀상시민모임, 노무현재단 광주운영위원회, 광산구 대외협력관을 역임했으며 참좋은 광산포럼 상임대표와 광산구자원봉사센터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오광복기자 kroh@

## 민주, 한국당 뺀 ‘개헌 공동전선’ 구축 모색

### ‘약속정치 연대’ 구성 제안... 선거제 개편 고리 과반발의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관철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과 공동전선 구축에 나서려는 모습이다.

제1야당이 한국당이 다음 달 중순이나 자체 개헌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실상 6월 개헌 저지 행보에 나서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헌 논의 구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총대는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이 먼저 됐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은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헌법 콘서트-우주투어(우리가 주권자다)’ 행사에서 “약속 정치 전문인 한국당 외에 바른

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모든 당 정책연구원 및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에 6월 동시개헌 실시 관련 합동세미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이 6월 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를 공약했고, 한국당을 빼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이 유호한 만큼 이른바 ‘약속정치 연대’를 구성하자는 것이 요지다. 여기에는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민주당의 판단이 깔렸다.

민주당의 이런 접근법은 ‘선(先) 개헌 국민투표 시기 확인-후(後) 개헌 내용 협의’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을 뺀 나머

지 야당과 개헌 시기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면 자연스럽게 개헌 내용에 대한 협의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이와 관련, 당내에는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개헌안을 공동으로 발의해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는 여야 간 합의가 우선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 개헌안이 발의되기 전에 과반 의석을 확보해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선 군소야당의 최대 관심사인 선거제도 개편이 ‘개헌안 과반 발의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헌정특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한국당이 개헌안 당론을 3월에 정하면 6월 개헌은 어렵다”면서 “한국

당을 뺀 다른 당과 개헌안 발의를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개헌 공동전선 구축에 성공할 경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때와 같은 대립 구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탄핵 대 반(反)탄핵’ 구도가 형성되고 탄핵소추에 대한 높은 국민적 지지여론으로 인해 반탄핵 진영에서도 이탈표가 나온 것처럼 민주당 등 6월 개헌 진영에서 과반 발의에 성공하면 한국당(116석)이 분열되면서 개헌 의결 정족수를 채울 가능성도 있다는 게 민주당의 기대 섞인 관측이다.

다만 한국당이 개헌 저지선(100석)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다는 점 때문에 원내지도부 등 공식 라인에서는 개헌안 과반 발의 방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 식당, 커피숍, 편의점, 노래방 - 점포임대

- 지리산 온천지구 내, 최고위치 (지리산 온천 정문앞)
- 1층 - 식당(65평), 커피숍 (55평), 편의점 (55평)
- 지하 - 노래방 (85평)
- 호텔건물, 비/건 없음, 커피숍/편의점 분할가능
- 임대료 - 협의, 즉시 시설 가능
- 문의 - 010-3605-5000

## 나주, 2층주택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집마당까지 차량 진입
- 광주에서 40분
- 즉시 입주 가능
- 보일러등 일부 수리 요함
- 시세 - 1억 1000만원
- 매매 - 8200만원
- 주인직매. 010-3605-5000